

# 제315회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임시회)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30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                              |   |
|------------------------------|---|
| 1.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 1 |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 1 |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1항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는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어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 있는 특위 심사 과제 부분 또 소위를 여러 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의 심사 과제로는 정치 쇄신 분야와 국회 쇄신 분야 두 분야로 나누어서 총 16개 사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정치 쇄신 분야의 심사 과제는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의 개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확대 방안, 선거에 있어서 지역주의 완화 방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등 7개 사항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선거제도 관련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쇄신 분야의 심사 과제로는 작년 11월 국회쇄신평의가 합의한 4개 사항인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제도 개선과 그 밖에 원 구성 지연 방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의 제한, 의원징계제도의 개선, 의원수당 지급 개선 등 총 9개 사항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는 선정한 과제 외에도 향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여야 협의를 거쳐서 심사 과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선정된 심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는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와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2개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개의 소위원회는 각각 여야 동수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여야 간사는 모든 소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가,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민주통합당 간사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과 소위원회 구성 상황은 배

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드린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제와 쇄신 분야별 2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첫 회의에서 우리가 이번 정치쇄신평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은, 오늘도 사실은 반 정도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과연 두 소위로 나누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는 사실은 작년에 거의 다루었던 사항이고 크게 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2개 소위를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까, 저는 결정한 사항이라도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 소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를 하지 않고 정치쇄신평위위원회에서 이 과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과연……

오늘도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과연 시간이 가면 얼마나 소위원회가 열정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참여하지 않고 정치쇄신평위위원회에서 나중에 의결할 때 합의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아닙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또 다른 의견……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진표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추가적인 의제 이런 것도……

○위원장 김진표 우선은 어저께 16개 의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할 의제가 있으면 소위

에서 다시 거론을 해서 양당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도록……

○이노근 위원 소위원회에서 거론하자는 말이지요?

○위원장 김진표 예.

○이노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표 함진규 위원님, 또 말씀……

○함진규 위원 예, 이채익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다 일정이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또 우리가 언론보도를 봐도 사실 본회의 말씀이 언론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쇄신평위는 주목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법안 발의권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열띤 토론을 해 놓고……

지난번에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위는 수십 차례 열어 가지고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5개 안전 중에서 하나, 원 구성 지연 방지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워낙 시각 차이가 커서 이것은 초창기에 토론을 하다가 사실 빼났습니다. 빼놓고 나머지 4건을 지금 여기 국회 2분과, 2소위에서 한 것 4개 이것은 심층적인 토론을 해서 여야 합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쇄신 분야는, 2소위는 여기서 한번 스크린을 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심층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다시 2소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유명무실한 소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합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10여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위 또 만들어 봐야 정족수도 안 돼 가지고…… 그것 비밀비재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도 지난번에 1분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2분과도 하나 더 만들자,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러면 여기 쇄신평위에 들어와서만 있지 그 소위에 1분과 하나 만들었을 때는 들어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취지에서 2분과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짠 걸 보니까 2분과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출석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차라리 그냥 소위 만들지 말고 여기서 심층적인 토론 해서 하나하나, 원 포인트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지……

정치 쇠신 분야에서도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선거가 목전에 점점 압박해 오는데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뒤서 한번 회의 때 원 포인트로 집중적으로 해서 넘겨 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 가지를 놓고 다 해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는.

그래서 차제에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없으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아마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심분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쇄신평위에 참여를 희망하실 때부터 뭔가 역할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은 제가 봐서는 중요한 역할을,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그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상임위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견을 결집해서 양당 간사님이 정리를 하고 원내 지도부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위 구성의 효율성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제심사소위에서도 하루 일정을 잡아서 논의했던 결과이니만큼 이대로 일단 스타트를 해 보면서 또 뭔가 의견 결집이 어려울 때 별도의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소위 일정이 사전 공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장도 그런 점들을 우려하고 걱정해서, 일반적인 다른 특위의 운영을 해 보면 성원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하나의 소위로 우선 8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발

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특히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크게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쇠신하는 이 특위는 다른 특위와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소위로 나뉘었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 정치쇄신평소위원회 8인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면을 논의해 봤습니다.

첫째로 정치쇄신평소위의 6개 과제를 정당개혁소위와 선거제도개혁소위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가 3개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당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은 하나하나가 토론할 때 어차피 같이 다루어야 되는,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해에 국회쇄신평위에 참여해서 많은 성과물을 내시는 데 기여하신 우리 함진규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지난 국회쇄신평위에서 4개는 완전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법안 형태로 갔고, 또 5개 의제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국회쇄신평위 위원회가 특별히 그렇게 다를 것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정한 16개 의제 하나하나가 300명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도 본회의의 법안으로 표결되기 전에 각 교섭단체 정당의 의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소위만으로 단독으로 또 우리 특위만으로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쇄신평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결의해서 10개의 법안 형태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양당 원내대표단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 국회쇄신평위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표결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해 주고, 또 추가로 우리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쇄신평과제심사소위와 정치쇄신평과제심사소위원회 2개의 소위원회로 운영을 하면서, 대신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 위원

회에 양당 간사가 다 함께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이 열여덟 분입니다마는 소위를 열 분씩으로 해서 스무 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인 저도 가능하면 촉진위원회,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 같은 것을 양 간사와 소위 매일 할 때마다 함께 사전에 하고 또 끝나고 하고 해서 우리 전체위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을 내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소위 구성이 끝나면 의제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앞으로 소위에서 의제의 논의 순서를 정해서 위원들께 알려 드리면 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도 소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소위 위원장님들이 좀 부여해 주시고 전체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해서, 소위를 없이 가게 되면 법안의 형태로 합의하는 데는 전체회의가 하기에는 산만하니까 일단은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정한 것인 만큼, 또 양당 간사와 소위 위원들이 합의한 것인 만큼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을 해 가면서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가 상당 부분 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논의할 게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가서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를 선거제도와 정당개혁과제로 둘로 쪼개든가 안 그러면 하나의 소위로 다 합쳐서 하든가 하는 것은 또 논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소위 구성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해 봐야 다른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우선은 이 소위 구성과 의제에 관해서는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오늘 남은 시간에 각 의제들에 관해서, 작년에 대선 국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깊은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발표된 의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 각 위원회에서 서로 상충된 의견이 우리 정치쇄신위원회에 요구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이 의제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위원장 김진표 예.

○이채익 위원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한 사항을 제가 존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거두어들이겠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외화내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만 화려하고 우리 실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끼리도 공감대가 부족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소위를 운영하시더라도 그때 봐서 우리 여야 간의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각 소위의 활동은 하되 전체회의를 수시로 좀 하셔서 전체회의에서 공감대를 좀 넓혀 가도록, 소위별로 다 진행된 부분이 결론 부분에서 또 이론이 전체회의에서 나오면 서로 좀 불편해지니까 중간중간 전체회의를 좀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표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위의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의제들 하나하나가 워낙 중요한 의제들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중간 과정에서 보고를 하고 또 토론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에게 각 의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드러내 놓고 거기에서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와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과 소위원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지금 2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난 제2차 전체회의에서 8인으로 구성되어서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는 기존의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지난번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특위가 제한된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너무 대선 때 조성된

경쟁 국면에서 깊은 검토 없이 발표되고 그것이 그냥 국민에게 어떤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여론에 부응하는 형태로 졸속 처리되어 가고는 이것이 정치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드러내 놓고 충분한 토론을 해 가면서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 때 발언하고 싶으신 위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난번 회의는 본회의 직전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는데, 우선 여기 의제로 써져 있는 정치쇄신평과제심사소위원회나 국회쇄신평과제심사소위원회의 안건이 대개 각 소위원회에서 그 순서대로 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제별로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논하기 전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정치쇄신평위가 국민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고 또 그런 압박감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치쇄신평위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년 12월까지 활동했던 국회쇄신평 활동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구성이 되고 지금 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 국회쇄신평위에서 합의가 되었던 안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국회쇄신평과제의 안건에도 올라와 있는데 언론에도 발표가 되고 각 당에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 가지 의제와 관련해서는 기합의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월국회에서, 어차피 지금 4월국회가 한 일주일 정도 추경 때문에 연장된다고 하는데 4월국회에서 기합의되었던 이 네 가지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결하고 양당에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합의가 어렵다고, 이번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유가 뭔지, 그건 동의하지 않는 바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건데 동의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 주에 처리할 수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다뤄서 4월국회에서 기합의되었던 이 네 가지만이라도 처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지금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아까도 함진규 위원님이 지난해 국회쇄신평위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그 경험으로 합의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특위가 국회 회기가 9월 말까지, 사실상 4월국회가 5월 7일로 오늘 연장되고 6월국회 그리고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국회 이렇게 세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때마다 합의된 것을 가능하면 빨리 입법 완료를 해서 넘겨야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쇄신평위 합의사항 네 가지 의제에 관해서는 교섭단체별로 한번 좀 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5월 7일 4월국회 끝나기 전에 입법 완료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문제를 위원장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각 당 간사님들께서도 지도부와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제가……

○**위원장 김진표** 우리 박민식 위원님 의견 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 예.

○**박민식 위원** 어떻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치개혁과제 또 정치쇄신평위라는 것이 하루이틀 생긴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아마 수차례 만들어졌습니까라는 의미 있는 산출물을 만들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지요. 국민들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고 하면 이 정치개혁과제라는 것이 당 정파뿐만 아니라 위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침해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급적 당리당략적인 또 정파적인 접근은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나 구호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많은 과제들 중에서 정말 하나라도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심을 엮어서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우리 김태년 간사님이 물론 국회쇄신평의사항, 2012년 11월 22일 날 합의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빨리 법률안으로 만들기를 촉구를 하자라고 하는데 뭐 지당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왜 그러면 그때 합의된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여태까지 처리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또 뭔가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 부분에 남겨 두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정치쇄신평의가 출발하자마자 왜 빨리 법안으로 만들지 않느냐 촉구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받은 과제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다 하기도 저는 힘들다고 보고, 어쨌든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생산적인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파를 뛰어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이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 작년 11월 22일 날 여야 간의 합의사항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운영위에서 왜 홀딩이 되었는지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세하게 누가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야 수뇌부에서 무슨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실무적으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의제와 관련해서 저는 일반 공직생활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참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국회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제대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자학적으로 엄청나게 대선 앞두고 뭐 월급을 30%를 깎겠다 이런 식으로 남발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 하면 월급을 30% 깎으면 시청과장 월급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팩트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해 가지고 국민을 오도시키는 일은 우리 위원들이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후원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원회 제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참 이것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후원회 때문에 의정활동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무슨 비리나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또 압력단체나 이익단체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원회 제도를 안건을 하나 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상임위원회 관계인데 보면 걸핏하면 ‘양당 수뇌부가 만나 이렇게 합의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넘겨줘요. 그런데 대표성이 있느냐 말이지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당구조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만 나오고 대립만 나오면 그냥 미리 저기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쇄신이라는 것이 국회의 정상화, 정치 정상화 차원이니까 팩트에 기초하고 원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제도개선 방안도 좀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저는 이 정치쇄신평의위원회에서 지금 2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소위원회가 되었든 어떤 당을 막론하고 가장 지켜야 될 원칙이 합리성과 원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노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작년 2012년 11월 22일 국회쇄신평의 합의사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작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약속에 대한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이 선명성 경쟁 비슷하게 이렇게 표를 의식해서 막 내놓다 보니까 그때 여기서 대선 전에 합의를 좀 해 놓고 막상 이것을 또 시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

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회의원을 여기서 한 번 하고 그만둘지 두 번 하고 그만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쇄신이라는 것이 정략적인 것도 떠나야 되고 지역적인 것도 떠나야 됩니까마는 우리가 지나치게 또 여론을 의식을 해 가지고,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는 국회에 가장 오래 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지키지 못 하니까 국민들한테 정치권이 지탄을 받는 것이예요. 저는 이것은 참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만들 때는 정말 국회에서 지켜야 할 선, 지킬 수 있는 선을 해 놓고 그것을 차근차근 지켜 나가는 것이 맞지 지키지 못할 것을 덜컥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못 지키니까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세비 문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정당제도라든지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인가 이것을 놓고서 얘기를 하면 저는 정당과 지역을 떠나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저는 국회쇄신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쇄신과제에서 이것을 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국회의원선거구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의원선거구 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의 경우에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지역은 농어촌이 들어와 있고 특히 도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농어촌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은 소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선거구제로 묶어 놓을 경우에 그 각 지역지역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안 좋게 얘기하면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지역,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도서가 많은데 도서지역은 또

섬섬마다 완전히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선거구제로 묶다 보니까 작은 도서지역은 영원히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도시는 모르지만 적어도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리고 이것을 도입하는 문제는 적어도 1년 전에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초의원 나가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동으로 나갈지 또 어느 당의 공천을 받을지를 준비를 하지 만날 보면 선거 직전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 갖고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고통을 주는데 이것은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적어도 정당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지방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5월 달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6월 달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7월 8월 넘어가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금년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소위 지방선거에 나오는 입지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1년 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디로 나갈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박수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김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당장에 시급한 것이 교육감선거제도입니다. 교육감선거제도도 지금 만약에 공직에 있는 분이 교육감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5월 말까지인가 아마 사퇴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부간에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전문위원이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법에 따르면 시한부 입법이 지금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90일……

○**위원장 김진표** 그 문제는 저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교과위 전문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아직 사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죽 듣고 분위기 파악도 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개혁 과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구체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또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이야기하면 또 그것은 말로만 끝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당, 그 어떤 정당의 잘잘못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기존 기성정치의 내용 관행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불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불신과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시대교체 시기의 역사적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하자면 현재 국회의사당 안의 문제인식과 쟁점만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기에 큰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섭단체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핵심이다 이런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얘기, 기존 기성정치의 틀을 바꾸는 큰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것이 이 틀 내에 이 특위 내에서 얼마큼 논의될 수 있느냐 이런 점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치고 나가는 이 소통구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생태계의 순환구조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정치개혁 이야기해 봐야 큰 성과가 없다, 아까 세비 삭감이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정치개혁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그런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치순환 생태계를 보장할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정당체제 자체의 기득권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변화 없이는 저는 그런 왜곡된 정치개혁의 분위기가 더 확산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점에서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에서는 교섭단체제도를 비롯한 그런 국회의 운영구조를 대폭 개선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인식 또 국회 안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수도…… 못 들어온, 말하자면 국회 바깥의 문제인식까지 국회에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운영구조 개선 문제를 꼭 의제로 삼으셔야 된다, 이 문제는 국회 개혁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던 그런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큼 폭넓게 이야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쇄신특위에서는 어쨌든 지난해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하고 실현하는 것부터 점점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정치쇄신과제소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현안들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우선 다뤄 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작년 대선 때 제기됐던 큰 틀의 변화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론화해 가는 그 세 가지 측면을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지방의회 또 단체장을 두루 거쳤습니다마는 참으로 지역에 있을 때 대한민국국회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항상 벼랑 끝에서 막판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이 나는 정치 개혁이고 정치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국회가 철저하게 버림받고 불신받은 것이 국회의원식 정치, 항상 국회의원은 보호받고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결정권을 가졌으니까 지방의원들이나 그분들의 아픔을 과연 대한민국국회가 얼마나 이해하고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우리 정치제도 또 지방선거 이런 부분도 여야가 테드라인부터 먼저 나는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또 내년 3월, 4월까지 갈 것인가 아니



면 최대한 언제까지는 우리가 합의해서 정치 지방생들한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교육감 선거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선거가 한 1년 남았는데 전국이 선거 분위기에 다 쫓아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육감 나오겠다 단체장 나오겠다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지방…… 특히 지방선거 아니면 교육감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합의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섭단체 부분, 후원회 제도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활발한 국정 또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이런 부분이 나는 선거법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음번 회의 때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서, 중앙선관위의 여러 가지 선거법의 제도개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들어 보고 이번 정치쇄신포럼에 선거법도 좀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서 선거법도 손질을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 경청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선거제도 개선안을 자체에서 논의 중에 있고 현재 상당한 진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보니까 6월 중순에 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6월 중순 정도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쇄신소위에서 중앙선관위도 사실은 선거의 직접당사자인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 가면서 안을 만들어야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복수안으로라도 선관위가 안을 확정 짓기 전에 우리 정치쇄신소위와 깊이 비공개로라도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저쪽에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저쪽의 선관위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저쪽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하여간 염두에 두고 우리 자문위원들을 선임하면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깊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을 선임해서 보충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까 발언했는데 교육감선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김재원 위원 교육감 후보 자격이 후보자 등록 신청 게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이런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탈당을 해야만이,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후보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 김진표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당의 당 대표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진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규제조항은 공직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이기 일반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저도 기억이 나네요. 당적을 가진 사람, 1년 내에 당적을 가진 사람은 교육감 출마를 못 하게 돼 있지요?

○문병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진표 그 말씀이……

○김태년 위원 5월 말까지 탈당해야 된다는……

○위원장 김진표 5월 말까지.

아까 황주홍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는데 황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감사합니다.

황주홍입니다.

우선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문제, 저도 거기에 적극적인 찬성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 제국에 비해서 지방자치의 인구 규모가 거의 뭐 한 10배, 평균 10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큼니다. 다른 선진국이 기초단위가 대개 몇천 명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대개 몇만 명이 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까지 중선거구제로 하는 바람에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랄까 그 기능을 제대로 잘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런 폐해랄까 역기능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역에 가 보면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아주 굉장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의제로, 우리 심의과제로 하나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원회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이노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 저도 후원회 문제도 한번 의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회는 저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후원회가 음성적인 그런 것 없이 투명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취지일 텐데 또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규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제약요건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원회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후원회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지금 후원회가 허용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지자체를 해보면서도 많은 그런 볼멘 불만이 있었는데 다른 선출직에 대해서 어디까지 열어 주는 것이 형평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후원회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의제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황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저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입장,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도 일반 대중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대랄까 또는 요구사항,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기대 수준에 좀 부응을 가져오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저는 기본적인 어떤 출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국민 일반이 보시는 국회는, 대개 정치권은 우선 뭘지 모르게 우리 국민 일반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뭔가 수준이랄까 행태가 상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회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입법권의 독점인데,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권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집단이기주의의 포로인 것처럼 이렇게 입법을 해내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 심의 의제에 들어 있는데 입법권이 자기중심적으로 남용돼 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문제인식 하에서 우리가 이번의 특위 운영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김영주 위원님, 다음에 문병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지역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새누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우리 정치쇄신이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갈 게 아니라 정말 기존의 우리 정치혁신위에서 넘어왔던 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소위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전체 틀에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양당 후보들께서 정치 쇄신 관련해서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약은 잘 지켜져야 되겠지만 그중에 꼭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공약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쇄신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다루기로 했다든가 새로 바뀌어야 된다고 공약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물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민주당도 안에서 각 모든 의원이나 정치학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선순위로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 하나 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40대·50대 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도 많고. 직장을 하나도 갖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볼 때 면책특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들이 가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국회 불신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우리 김태년 위원께서 얘기하시고 대선 전에, 대통령선거 전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부터 우리 정치쇄신위에서 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5월까지 연장된—그런 부분에, 처리할 부분 중에서는 겸직금지조항 같은 것 이런 부분은 먼저 처리를 하고 장단기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여야 간

사께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소선거구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토론토 좀 하고 각 당에서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히 거르고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 정치쇄신위로 오면 많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병호 위원 인천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에 배정이 돼서 국회의 쇄신 문제를 많이 다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쇄신평의 의제가 조금은 저는 협소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내려놓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가 지금 일하는 국회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개헌해야 할 문제지만 이게 정부와,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 쇄신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개헌을 해야겠지만 개헌을 아직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국회 시스템을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중요 의제로, 한 축으로 또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보면 국회가 일을 잘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면 국민들은 특권을 더 줄 겁니다. 또 월급도 더 가져가라,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회가 일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회의원 너희들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우리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무슨 권한이 많고 월급이 많나?'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를 중요 의제로 설정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위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지금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라든가 예산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

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사실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해외 선진 의회의 그런 실상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는데 30명이예요, 위원이. 그러니까 상임위 하면 질문시간이 7분인데 할 수가 없어요. 7분 동안 뭘 합니까, 7분 동안 거기서? 그것도 한 달 가야 두세 번 열리는 상임위에서 과연 무슨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방에 국장들·담당관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위원장 이름은 몰라도 아태소위원장 이름은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의회가 소위 활동 위주로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문회 위주로 많이 돼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주안점을 뒤서 국회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지금 사실 저는 이것은 겉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안 건드리고 자꾸 겉가지만 건드려 봐야 아무 이게 진전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회의 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되고 다만 국회가 일하는 장을 공간을 좀 더 확대시키는 이 의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성과물을 낼 때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문위원들께서 지금 현재의 과제는…… 자꾸 위원들 무슨 권한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하지만 좀 더 사실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확대시키는 것을 중요 의제로 저는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문병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주객이 좀 전도된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각론 분야에서 다 토론이 가능한 말씀

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사실 이 소중한 시간에 뭐가 좀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감히 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뭐라고 할까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오늘은 뭐가 새로 안건으로 해서 진지한 토론이 될까 하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만 자꾸 말로만 그냥 하다 끝나는,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서 막판에 가서 그냥 미흡한 결과물을 내놔서 또 다른 실망을 시켜 주지 않을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새벽밥 먹으면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도출해 냈는데, 물론 스크린은 할 수 있지만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다시 또 손질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양당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게 들어간 것이지, 정말 코피 날 정도로 새벽에 모여서 한 것을 지금 와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모순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또다시 운영위에 계류 중이면 제 생각에는 차기에 구성되는 쇄신특위에서 아마 또 4년 내내 그냥 떠들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그리고 각 당 지도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난번에 많은 것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법안이 안 올라가 있는 것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보면요 연로회원 지원금 가지고 사실 양쪽 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희 19대 의원들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 왜 통과 안 시킵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거기서 자꾸 찾아오시고 연로회원들 오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정말 힘들게 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했는데 운영위에서 계류 중에 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낮잠 자고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먼저 각 당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지금 와서 그것 풀어놓고……

의원겸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짜 냉혹하리만큼 의원겸직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 양당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풀어놓고 다시 논의해 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원직 활동하면 돼요. 다른 것을 자꾸 하시

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안을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법안발의권이 없습니다. 김진표 야당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아마 야당 쪽에서 먼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법안발의권을 받아 내시는 게,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아마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토론한 것을 운영위원회에 또 가져가고 이게 몇 단계를 거치면 아무리 좋은 안을, 완벽한 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간 제약 받으면서 이렇게 해도 법안발의권이 없어서, 그 전에는 법안발의권이 있었는데 그것 왜 못 해요? 여야 각 당 지도부에서 합의만 해 주면 안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실 분들도 많고요. 김관영 위원님께서 여기에 유력한 대선후보 참여시키고 얘기해요. 저는 좋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들 와서 대선 때 공약할 것 얘기하란 말이에요. 안 나오시고 뭐가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다면 저도 빠져 줄 용의가 있어요. 와서 실질적인 것 토론 한번 하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 반영해 줬으면 하기 때문에 법안발의권을 차제에 좀 받아 내셔서 실질적인 쇄신특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체장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는 50%까지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의의 초점에서 중심이 됐던 게 저희 의원들하고 달라서 단체장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런 게 되면 전체적으로 후원회제도도 제한적이지만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지금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 50%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방광역의원을 좀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현행 교육감 포함해서 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단체장하고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갑니다. 기초선거에서는 단체장은 또 소선거구제로 가요. 그런데 기초의원만 유일하게 중선거구제예요.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선거, 같은 지방선거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언론도 이것에 대해서 ‘무공천화 하자’ 이런 말씀만 하지……

지금 다른 데는 소선거구제인데 지방의원은 이거 나눠 먹기식이거든요. 어디든지 40%씩은 가져가요. 나머지 20%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잘못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들도 헛갈리는 선거제도이고.

그다음에 책임정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단체장이든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을 적절히 나눠 먹는 식으로 선거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감선거도 정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정당에서 다 지원하고 말로만 뒤에 빠져 가지고 ‘정당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삼사십억씩 가는 선거자금 관련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체에 각론에서 다루고 오늘은 다음에 할 안건이 뭔지 원 포인트로 해서 과제를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마디 놓쳤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것 네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이게 올라가 있는 것을 이번 쇄신평에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손을 댈 건지, 다 합의해서 운영위에 가 있는 것을 원점에서 다시 돌릴 건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특위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의제를 추가하는 문제부터 또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하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특위가 세 번째입니다마는 사실은 폭넓게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날이니 모든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으로 가야 돼서 우리 특위를 양당 간사들과 협의해서 전체회의를 자주 열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정해서 위원님들께 자료와 함께 보내 드리고 그것을 전체회의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그 피력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소위에서 자문위원들

의견도 듣고 법안의 형태로 협의해서 만들어 내고 그것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우리 전체 의원의 입법권으로 발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번 전체회의부터는 의제별로 집중 토론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 국회쇄신평위에서 합의한 10개의 법안에 관하여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표결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가 연장되니까 시간은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렵게 합의한 것인데 처리해서 입법을 완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쇄신평소위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셔서, 그 전에 양당 지도부와 간사님들이 협의하고, 저도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마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때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각 당의 위원님들의 입장이 의총 등을 통해서 좀 더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쇄신평위에서만 합의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새로 구성된 정치쇄신평위의 논의사항을 봐 가면서 결정하자’ 이것이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은 운영위원회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빨리 입법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국회쇄신평소위에서 그 문제를 먼저 의논해 주셔서 가능하면 지도부와 협의해서 5월 7일 전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 문제를 입법 완료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보탤까 합니다.

그리고 입법권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양당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했는데 정부조직법 등 법안을 할 때 우리 특위에 대해서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특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그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양당의 원내대표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5월 중순경에 선거로 새로 교체되기 때문에 새 원내 지도부와 정치쇄신평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입법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각 당 지도부에 의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각 위원님들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각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렴될 것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정치가 불신받아 온 정치의 운영 과정이, 권력구조가 어떻게 보면 소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 속에서 정치를 운영해 온 것이 정치가 불신을 받아 온,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 상태에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권을 차지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하나 불리하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불신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정치 불신의 근본 문제는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을 별도의 특위를 두어서 논의하자고 하니까지는 정치쇄신특위가 개헌특위와도 필요하면 공통된 토론이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함께 한다든가 해서 그 문제와도 잘 연결해 가면서 해야 근본적인 정치 불신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됐고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개진되었기 때문에 오늘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오찬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은, 특히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개선이라든가 소선거구제도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면 오찬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셔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5월 달은 국회가 쉬는데 이 위원회는 5월 달에도 계속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표** 5월 달에도 소위원회는 소위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법발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본 원칙은 작동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특히 5월 달은 위원님들 개별 사정들이 복잡하게 있어서 살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치쇄신 과제심사 (10인)	김상훈 김재원 ◎박민식 유승우 이명수	새누리당(5)
	김관영 김영주 김태년 황주홍	민주통합당(4)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국회쇄신 과제심사 (10인)	박민식 서용교 이노근 이채익 함진규	새누리당(5)
	김관영 김성곤 ◎김태년 문병호 원혜영	민주통합당(5)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 김관영 김상훈 김성곤 김영주
- 김재원 김진표 김태년 문병호
- 박민식 심상정 이노근 이명수
- 이채익 함진규 황주홍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 전문위원 임재주
- 입법심의원 권영진